

강희락 영장 기각... 함바 비리 수사 '삐긋'

수사속도 늦춰지나... 검찰 "내주초 영장 재청구"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석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밤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와 유씨가 구속돼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나아가 수사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입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

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척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국의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강 전 청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한섭 부장검사)는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과 실제로 이뤄진 인사 조치 사이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가 당시 경찰 조직의 수장직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순

조롭게 발부되고 나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유씨의 로비 대상이 됐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 다음에는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정·관계 쪽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그림도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첫 번째 거울금 로비 대상자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던 강 전 청장의 구속이 뒷받침에 따라 검찰로서는 초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씨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채 수사를 진행해온 게 아니라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진 접촉신고 경찰 43명 조사

경찰청장 "연루땐 가혹 조치"

조현오 경찰청장은 14일 '함바 비리' 브로커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와 접촉했다고 신고한 경찰 43명을 조사해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뇌물사건의 특성상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감찰에서 혐의가 나오면 직무고발을 통해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조 청

정·관계 쪽으로 성급하게 수사망을 확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이길법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도 다소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씨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채 수사를 진행해온 게 아니라는 지적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은 울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유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된 해외주재관 포함 43명의 경찰을 조사해 비리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가혹할 정도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뇌물사건의 특성상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감찰에서 혐의가 나오면 직무고발을 통해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조 청



아문화도시조성위 4기 출범식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제4기 위원회 출범식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협 입법로비 거액후원금 제공 의혹"

선관위, 간부 3명 수사 의뢰

신협 "지원들 자발적 후원"

신협동조합 중앙회가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신협 중앙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 입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검찰, 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신협중앙회 고위 간부 등 3명을 기부금으로 지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부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협 측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정황을 포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사처럼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 자금과 상환 준비금 등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처리에는 반대해 왔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신협중앙회가 있는 대전지검에 이첩했고, 대전지검은 최근 신협 중앙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협측이 법 개정을 조건으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줬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협 측이 관련 디스코드 등을 이미 파기해 수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10만 원씩 기부를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 같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잡음 없이 깔끔한 일처리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의 기

승진결과 꼼꼼히 쟁쟁 직원들의 신망이 높아졌다. 부이사관 승진 이후 본청에서는 첫 보직으로 공무원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다. 민선 5기까지 지향하는 도시 운영 방향 및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광주고 ▲조선대 ▲의회사무처 의사당당관 ▲동구부구청장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송영한 건설방재국장

전형적인 대기기만성형으로, 묵묵히 업무를 추진하며 착실히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국장 승진이 다소 늦었지만 고시 출신으로서 명석한 두뇌와 인맥을 지니고 있는데다 다양한 경험까지 쌓아 주변의 기대가 높다. 승진과 동시에 광주의 건설방재를 책임지는 수장에 앉을 만큼 시장의 신임도 높다. ▲전주고 ▲한양대 ▲건설지원과장 ▲건축주택과장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이옥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잡음 없이 깔끔한 일처리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의 기 승진결과 꼼꼼히 쟁쟁 직원들의 신망이 높아졌다. 부이사관 승진 이후 본청에서는 첫 보직으로 공무원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다. 민선 5기까지 지향하는 도시 운영 방향 및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광주고 ▲조선대 ▲의회사무처 의사당당관 ▲동구부구청장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심정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단진 성격이지만 정책적 판단에 앞서 직원들에게 두루 의견을 들어 인기가 높다. 추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토목직업무 전반을 폭넓게 경험한 베테랑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조대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광주대 ▲광산구 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수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선후를 꼼꼼히 따져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이나 민원인들과 편하게 대화하며 상호 존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 문화수도정책관을 거쳐 2011년 디자인비엔날레 준비 등 현안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고 ▲한국방송대 ▲과학기술과장 ▲문화수도정책관 ▲투자유치기획단장



光日만정

- 김종우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민주 '로스쿨 부정 입학설' 실언 사과

한나라, 이석현·박지원 고소

민주당이 14일 정부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석현 실언 파문'의 조지 진화를 시도하면서 무차별 폭로를 경계하고 나섰다.

전날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당의 폭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청문회 공세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에 앞서 이 의원과 통화,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당국자의 설명을 존중하며, 스스로 조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안 대표와 가족, 서울대 로스쿨 측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실수는 실수고, 청문회는 청문회"라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폭로정치를 뿌리뽑겠다"며 이날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종합

시설

지하철 안전문제 당면 재점검하라

광주도시철도 1호선 역사(驛舎)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금남로 4가역에 이어 최근에는 문화전당역 지하 4층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하철은 땅 속 수십m의 지하 시설물인데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소한 사고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결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안전의식은 너무 안하고 무감각하다. 철도공사 측은 역사의 잇단 누수에 대해 "지하철 역사 구조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 시설물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중교통 시설인 지하철은 하찮은 문제로 대형 참사 사고를 부를 수 있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의 누수는 누전과 감전 등

신종플루 예방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강주위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잇따라 솟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에서 13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이모(55)씨가 숨졌다. 최근 순천에서도 신종플루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장수군에서는 여중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의 예에서 보듯 신종플루가 호흡기로 감염되는데 전염성이 강한 만큼 최선의 방안은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갖고 철저히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도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완벽한 대책을 세우되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다.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 역시 예방 대책을 당당히 마련해야 한다.

개다가 일반 약국에서 신종플루 치료

광주시 간부공무원 49명 전보

광주시는 14일 4급 이상 간부공무원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부이사관인 환경생태국장에 신광조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건설방재국장에 송영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이옥현 국장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심정보 국장이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김형수 국장이 전보됐다.

〈명단 14면〉

지방기관에서 준임장급인 공보관에는 이병렬 계약심사과장이, 기업유치지원관에는 안치환 시의회 총무담당관이, 국제협력관에는 김정훈 도시재생과장이, 시의회 총무담당관에는 김효성 건설행정과장이, 시의회 의사당당관에는 문석훈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전보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정에 대한 철학과 미래 비